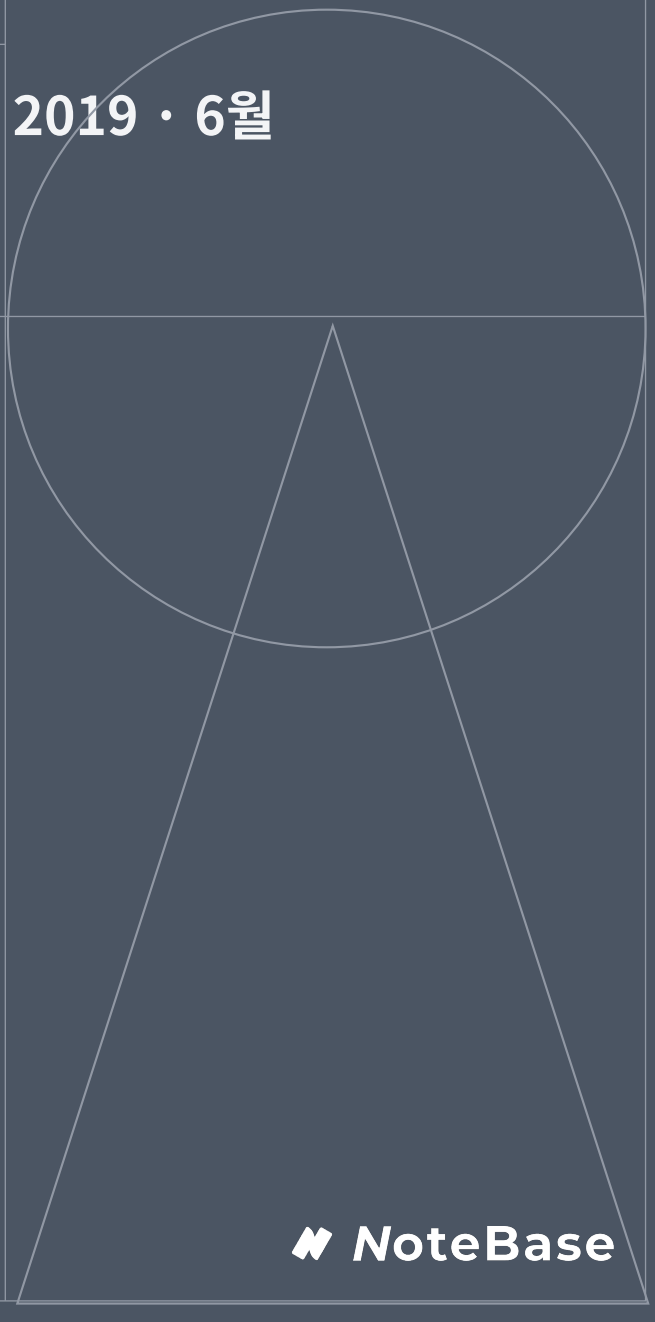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9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9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9 · 6월

문 1. <보기>의 (가)~(라)에 해당하는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다음은 근로자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가) 근로자들의 수기 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을 파악한다.
(나)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깊이 있게 조사한다.
(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라)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답을 하도록 한다.

① (가)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활용된다.
② (나)와 (다)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③ (나)는 (라)에 비해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④ (나)와 (라)는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의 면접법과 (다)의 참여 관찰법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활용할 수 있다**. 면접은 말로 묻고 답하며, 참여 관찰은 함께 생활하면서 행동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이미 작성된 수기를 분석하는 문헌 연구법이다. 문헌의 내용을 수량화하여 경향을 파악하는 **양적 연구**에도, 글에 담긴 경험과 의미를 깊이 해석하는 **질적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기에 나타난 불만의 유형별 빈도를 세거나, 불만을 느끼게 된 맥락을 해석할 수 있다.

② X: (나)는 대화로 생각을 깊이 파악하는 면접법이고, (다)는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모습을 관찰하는 참여 관찰법이다. 두 방법 모두 조사 대상자에게 **읽기·쓰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면접은 구두 응답을 받고, 참여 관찰은 행동과 생활 모습을 살피므로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글로 된 질문을 읽고 답해야 하므로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라)의 질문지법이다.

③ O: (나)의 면접법은 대화 중 응답이 불분명하면 다시 묻거나 새로운 내용에 관해 추가로 질문할 수 있다. 반면 (라)의 질문지법은 미리 정한 질문과 응답 형식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다. 따라서 면접법이 질문지법보다 **질문의 내용과 순서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쉽다.

④ O: (나)의 면접법은 말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이고, (라)의 질문지법은 글로 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두 방법 모두 **언어로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질문지법은 연구자와 응답자가 직접 만나 대화하지 않아도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NoteBase

문 2. <보기>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의 사회 과학계에 영향을 끼쳤던 사회학자 갑(甲)은 낙후된 국가의 빈곤 문제를 '종속에 의한 저발전의 심화'라고 설명하며, 근대화를 설명하는 ㉠ 또 다른 이론에 도전장을 던졌다. ㉡ 갑의 이론은 서구 선진국에 의해 주도된 이론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다. 1970년대 한국에도 유입되어 최근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① ㉠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해 진화론을 기초로 한다.

② ㉡은 낙후된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외부에서 밝히고 있다.

③ ㉡은 ㉠과 비교하여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한다.

④ ㉠은 ㉡과 달리 각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근대화 이론은 각국이 다양한 경로로 발전한다고 보기보다 **서구 선진국이 거친 일정한 발전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의 종속 이론은 서구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 각국이 주체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제시문의 '종속에 의한 저발전의 심화'는 가난한 국가의 저발전을 선진국에 대한 종속의 결과로 설명한다. 따라서 ㉡은 종속 이론이고, 이 이론이 비판하는 ㉠은 서구의 발전 경험을 근대화의 모형으로 삼는 근대화 이론이다.

① O: 근대화 이론은 사회가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본다. 사회 변동을 일정한 방향의 진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진화론에 기초**한다.

② O: 종속 이론은 낙후된 국가가 선진국에 종속되어 자원과 부를 빼앗기는 국제적 관계에서 저발전의 원인을 찾는다. 즉, 해당 국가의 전통적 제도나 가치관 같은 내부 요인보다 **선진국과의 지배·종속 관계라는 외부 요인**을 강조한다.

③ O: 근대화 이론이 서구의 제도와 기술 등을 받아들여 서구의 발전 경로를 따를 것을 강조하는 데 비해, 종속 이론은 선진국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발전 전략과 자생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종속 이론이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한다.

④ X: 근대화 이론은 서구 선진국이 거친 발전 과정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단선적 발전관**을 취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는 표현은 '각 국가는 서구 선진국과 같은 일정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3. <보기>는 질문 (가), (나)에 따라 경제 체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보기>

	A	B
㈎	예	아니오
㈏	아니오	예

① A가 계획 경제 체제라면, (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될 수 있다.

② A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가)는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가 될 수 있다.

③ B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가)는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가 될 수 있다.

④ (나)가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가?'이면, A는 B보다 경제적 유인체계를 강조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B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A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계획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보다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므로, 이 질문에 A는 '예', B는 '아니요'라고 답하는 (가)의 분류와 일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가)의 응답은 A가 '예', B가 '아니요'이고, (나)의 응답은 A가 '아니요', B가 '예'이다. 각 선지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A와 B를 정한 뒤, 질문에 대한 두 체제의 응답이 표와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① X: A가 계획 경제 체제라면 B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두 체제 모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A와 B 모두 '예'라고 답하므로, A는 '아니요', B는 '예'인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② X: A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B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 쪽은 **계획 경제 체제인 B**이다. 따라서 제시된 질문에는 A가 '아니요', B가 '예'라고 답하므로 (가)가 아니라 (나)에 들어갈 수 있다. (가)에는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적합하다.

③ O: B가 시장 경제 체제라면 A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시장 경제 체제는 경제 주체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계획 경제 체제는 상대적으로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제시된 질문에 A는 '예', B는 '아니요'라고 답하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④ X: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이다. (나)에 대한 응답은 A가 '아니요', B가 '예'이므로 A는 계획 경제 체제, B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개인의 이윤이나 소득 증가가 자발적인 생산 활동을 이끄는 경제적 유인 체계는 **A보다 B에서 더 강조**된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경제 활동의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NoteBase

문 4. <보기>의 (가)와 (나)는 민주정치의 참여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① (가)의 정치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나)는 (가)에 비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③ (가)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④ (나)의 정치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정책 결정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이다. 대표를 통한 간접 참여도 민주적 주권 행사 방식이므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국민이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국가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이다.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대표가 결정권을 행사**하므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② O: (나)는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 소환 같은 직접 참여 제도로 대의제를 보완한다. 국민이 주요 사안에 직접 투표하거나 안건을 제안하고 대표를 통제하면, 선거만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참여와 동의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③ O: 대의제는 인구가 많고 정책 사안이 복잡한 현대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모든 국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다. 이에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정책 결정을 맡긴다. 이는 국민의 참여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이다.

④ O: (나)는 시민에게 선거 외에도 국가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은 자신의 참여가 정책이나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동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5.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과 을(乙)은 결혼한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丙)이 홀로 키우던 자녀 A와 B 중에서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이후 A를 키우던 중 갑과 을은 불화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미성년 자녀인 A에 대한 양육권은 갑이 갖기로 하였다. 1년 뒤, 갑은 교통사고로 3억원의 재산과 1억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① 갑과 을은 이혼할 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② A가 받을 수 있는 갑의 상속액은 8천만원이다.
③ 병이 사망한 경우, 병의 법정 상속인은 B이다.
④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A는 친양자로 입양되어 **친생부 병과의 법적 친자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병의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병의 자녀로 남아 있는 B가 병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이혼 절차**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미성년 자녀 A가 있더라도 협의이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X: A는 친양자이므로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상속한다. 을은 갑과 이미 이혼하여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없고, B는 갑의 자녀가 아니므로 갑의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A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재산뿐 아니라 빚도 승계하므로 순상속액은 3억원 − 1억원 = **2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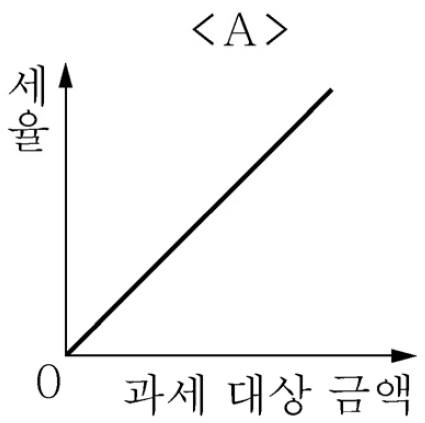
③ O: 민법 제908조의3제2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A는 갑과 을의 친양자가 되면서 병과의 법적 친자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B는 병의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므로 **병의 법정 상속인은 B**이다. 갑과 을의 이혼만으로 A와 병의 친자관계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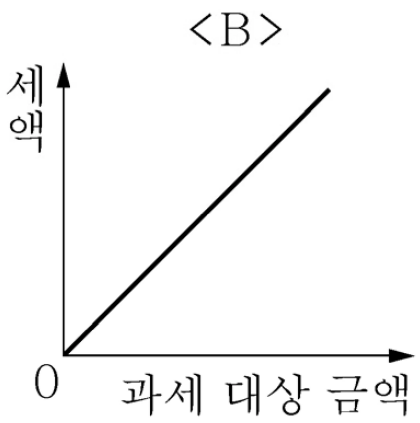
④ X: 민법 제908조의3제1항에 따라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따라서 A는 갑과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일반 양자가 아니라 **친생자로 기재**된다. 갑과 을이 이혼하고 갑이 양육권을 갖더라도 A와 을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6. <보기>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일반적으로 A는 조세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 일치하는 조세에, B는 ㉡ 일치하지 않는 조세에 적용된다.

① B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② A는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③ ㉠은 ㉡에 비해 조세 징수 비용이 크다.

④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일반적으로 간접세인 ㉡보다 **직접세인 ㉠에서 더 크다**. 직접세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과세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A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누진세이다. B는 세액이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또한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다.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은 직접세, 일치하지 않는 ㉡은 간접세이다.

① O: B와 같은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나타낼 수 있다.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같은 세율로 과세하더라도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아져 불리하다.

② O: A와 같은 누진세는 **별도의 정책 변경 없이 경기 변동을 완화**한다. 호황기에 소득이 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지므로 소비 증가가 억제된다. 불황기에 소득이 줄면 세 부담도 줄어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감소가 완화된다. 이러한 작용이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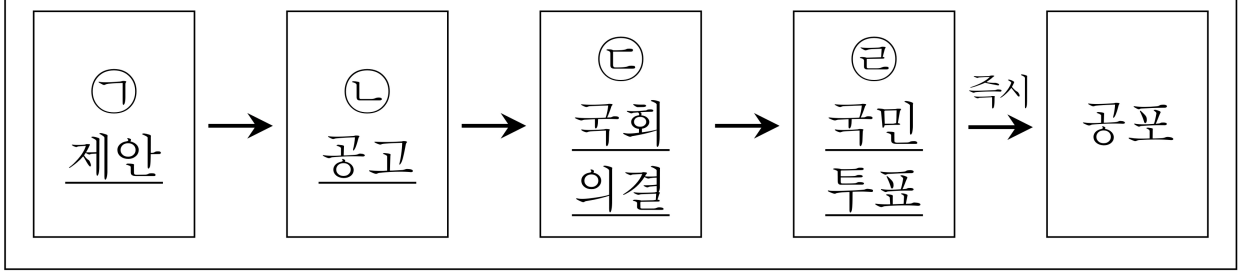
③ O: 직접세인 ㉠은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공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징수 비용이 크다. 간접세인 ㉡은 사업자가 상품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소비자에게서 거두어 납부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므로 **직접세보다 징수가 간편**하다.

④ X: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일반적으로 간접세인 ㉡보다 **직접세인 ㉠이 더 크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 등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반영할 수 있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이 소득 중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반면 간접세는 상품 소비 등에 부과되어 개인의 소득 수준을 직접 반영하기 어렵고 역진적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비교가 반대이다.

NoteBase

문 7. <보기>는 헌법 개정 절차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국회에서 ㉠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국회의장이 한다.

③ ㉢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은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헌법개정안의 제안이다. 국회에서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하며, **국회가 발의하는 개정안의 제안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128조 제1항, 제89조 제3호).

② X: ㉡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공고이다. 국민이 개정안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해야 하며, 공고 주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헌법 제129조).

③ X: ㉢은 국회의 의결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90일 이내'가 잘못되었다. 의결에 필요한 찬성은 출석의원이 아닌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맞다(헌법 제130조 제1항).

④ O: ㉣은 국민투표이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이때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모두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투표 참여 요건의 기준은 전체 국회의원선거권자이고, 찬성 요건의 기준은 실제 투표자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제3항).

NoteBase

문 8. <보기>의 밑줄 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①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국내 총생산은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재화의 가치만 포함하며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하지 못한다.

③ 국내 총생산은 총량의 개념이므로 소득 분배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④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반드시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GDP에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모두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하 경제는 세금 회피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는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GDP 통계에서 누락되기 쉽다**. 선지는 통계로 포착되지 않는 거래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측정상의 한계를 가리킨다.

② X: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가치만 포함한다'가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로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제공된 유료 진료나 미용 서비스의 가치도 GDP에 포함된다.

③ O: GDP는 한 나라의 생산 규모를 합산한 **총량 지표**이므로, 생산으로 얻은 소득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는 보여 주지 못한다. GDP가 같더라도 소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된 나라와 비교적 고르게 분배된 나라가 있을 수 있다.

④ O: GDP는 생산의 시장 가치를 측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나 여가 감소**를 국민의 손실만큼 차감하지 않는다. 생산이 늘어도 환경이 악화되거나 노동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NoteBase

문 9. <보기>의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올림픽은 전세계 모든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즉, 올림픽은 경제적 지위, 학력, 인종, 성별이 다른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해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① 사회갈등은 사회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② 행위자에게서 파악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전제한다.

④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상황정의를 중시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올림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높인다는 설명은 **기능론**의 관점이다. 기능론은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중시하며, 사회갈등을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는 올림픽이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하면서 전체 사회의 유지와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는 기능론의 관점이다.

① O: 기능론은 사회가 존속하려면 구성원 간의 협력과 통합 등 필요한 기능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하므로, 사회갈등을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긋난 현상**으로 이해한다.

② X: 개인의 행위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한다는 비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해당한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기능론은 사회 전체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③ X: 사회적 관계의 기본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갈등론은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불평등을 강조한다. 기능론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와 협력을 중시한다.

④ X: 사람들이 상황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인 '상황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기의 기능론적 설명은 개인의 상황 해석보다 올림픽이 사회 전체의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에 초점을 둔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밑줄 친 ㉠과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과 ㉡은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보기>
◯◯ 기업 경영 혁신 보고서
◯◯ 기업의 경우 구성원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 표준화된 업무 처리 지침을 갖추고 있는 등 ㉠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이지만, 다가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① ㉠은 ㉡보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② ㉠은 ㉡에 비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③ ㉡은 ㉠과 달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④ ㉡은 ㉠과 달리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료제인** ㉠의 특징이다. 관료제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므로, 유연한 대응을 중시하는 탈관료제보다 **업무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기 쉽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은 구성원 간 위계와 표준화된 업무 처리 지침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료제이다. ㉡은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조직이므로 탈관료제이다.

① O: 관료제는 상하 간 위계가 뚜렷하여, 상층부의 지시를 하층부에 전달하고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탈관료제는 조직의 수평화와 권한 위임을 통해 중간 관리층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줄인다.

② O: 관료제는 개인보다 직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업무를 배분하고, **표준화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새 담당자가 정해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이어 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③ X: 과업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탈관료제인 ㉡이 아니라 **관료제인** ㉠이다.
관료제에서는 업무 처리 방식이 규칙과 절차로 정해져 있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될지 예상하기 쉽다.
탈관료제는 상황에 따른 자율적 판단과 유연한 대응을 중시하므로 업무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④ O: 관료제는 승진에서 근무 연수와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탈관료제는 **개인의 능력과 업무 성과**를 더 중시하므로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매달 A군은 1만엔을, B군은 100달러를 구입한다. ㉠ 원/엔 환율 변동과 ㉡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A군과 B군이 각각 엔화와 달러화를 구입하기 위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아래의 표와 같이 변하였다.

구분	변동 전	변동 후
A군	9만원	10만원
B군	11만원	10만원

① 엔화의 수요 감소는 ㉠의 요인이다.

② 달러화의 공급 감소는 ㉡의 요인이다.

③ ㉠은 우리나라 대일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④ ㉡은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유학 경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은 같은 1만 엔을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늘어난 **원/엔 환율 상승**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우리 상품의 일본 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본 상품의 원화 가격은 올라, 대일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대일 상품 수지를 개선**하는 요인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은 각각 엔화와 달러화를 일정량 사는 데 필요한 원화 금액을 나타낸다. 표에서 A군의 1만 엔 구입 비용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으므로 ㉠은 원/엔 환율 상승이다. B군의 100달러 구입 비용은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으므로 ㉡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다.

① X: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엔화 수요가 감소하면 엔화의 원화 표시 가격이 내려가므로 **원/엔 환율은 하락**한다. ㉠과 같은 환율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은 엔화 수요 증가나 엔화 공급 감소이다.

② X: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달러화 공급이 감소하면 달러화의 원화 표시 가격이 올라가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 ㉡과 같은 환율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은 달러화 공급 증가나 달러화 수요 감소이다.

③ O: ㉠은 원화 가치가 엔화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다른 조건이 같고 우리 상품의 원화 가격이 일정하다면 일본 소비자가 지불하는 엔화 가격이 내려가 대일 수출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일본 상품의 엔화 가격이 일정하다면 우리나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원화 가격이 올라 대일 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일 상품 수지, 즉 일본에 대한 상품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④ X: ㉡은 같은 달러 금액을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드는 변화이다. 미국 유학에 드는 달러화 경비가 일정하다면 이를 마련하는 원화 비용이 줄어들므로, 유학 경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NoteBase

문 12. <보기 1>의 A, B 선거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구분	A	B
내용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

<보기 2>

ㄱ. 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된다.

ㄴ. 일반적으로 A 방식에 비해 B 방식에서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ㄷ. B 방식보다 A 방식이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ㄹ. B 방식이 A 방식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B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이므로 소수 의견이 의석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A와 같은 소선거구제는 큰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에서 A는 한 선거구에서 대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고, B는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두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ㄱ. O: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므로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집단의 후보도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

ㄴ. X: 사표는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1위를 제외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모두 사표가 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여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하는 쪽은 B가 아니라 **A인 소선거구제**이다.

ㄷ. O: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마다 1위 한 명만 당선되므로 지지 기반이 큰 정당에 유리하고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기는 어렵다. 유권자도 사표를 피하려고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에게 표를 모으는 경향이 있어 **양당제를 촉진**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이에 비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ㄹ. X: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의 범위가 넓어 후보자가 더 넓은 지역과 많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경향**이 있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은 소선거구제의 특징이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므로, 두 보기를 묶은 ②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자료는 갑(甲)국의 t기와 t+1기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기>

구분	t기	t+1기
A당	40%	60%
B당	32%	37%
C당	25%	2%
기타	3%	1%

* 두 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임.

① t기에 비해 t+1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감소할 것이다.

② t+1기와 달리 t기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을 것이다.

③ t기에 비해 t+1기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적 권한이 많아졌을 것이다.

④ t+1기에 비해 t기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t기에는 A·B·C당이 주요 세력을 이루는 **다당제**인 반면, t+1기에는 A·B당 중심의 양당제 경향이 강하다.
다당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서로 다른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므로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t기에는 A당 40%, B당 32%, C당 25%로 세 정당이 주요 세력을 이루므로 다당제로 볼 수 있다.
t+1기에는 A당 60%, B당 37%에 비해 C당은 2%, 기타는 1%에 그쳐 두 정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양당제 경향이 나타난다. 양당제는 정당이 오직 두 개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두 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

① X: t+1기에는 A당의 비중이 40%에서 60%로 커지고 다른 정당의 견제와 협력이 필요한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다수당의 횡포가 감소한다고 보기보다,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X: 연립 정부는 여러 정당이 함께 구성하는 정부로, 의원내각제에서 단독 과반 정당이 없을 때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대통령은 의회와 별도로 선출되어 정부를 구성한다. t기에 A당의 비중이 과반에 못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고 추론할 수 없다.

③ X: 행정부 수반의 **법적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소속 정당의 선거 결과가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권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t+1기에 A당의 세력이 커져 국정 운영의 정치적 기반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이를 법적 권한의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④ O: t기에는 A·B·C당이 각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여러 집단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 정당 간 협의와 타협 과정에서 서로 다른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두 정당에 세력이 집중된 t+1기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

NoteBase

문 14. <보기> 표의 A~C는 정치참여집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보기>

질문 내용	A	B	C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가?	예	예	아니오
(가)	예	예	예

①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B, C와 달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B는 A와 달리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③ C는 B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④ (가)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당·시민단체·이익집단은 추구하는 이익과 정치적 책임의 유무가 다르지만,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가)의 질문에는 세 집단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A는 정당이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두 집단 중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 B는 시민단체이고, 구성원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C는 이익집단이다.

① X: A인 정당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그러나 정치 사회화는 정당만의 기능이 아니다. 정치 사회화란 정치에 관한 지식·가치·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시민단체와 이익집단도** 구성원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이 기능을 수행한다.

② X: B인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당과 이익집단도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시민단체가 시민의 요구를 모아 정치 체계에 전달하는 투입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맞지만, 이를 정당과 구별되는 결성상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다.

③ X: 시민의 다양한 의사가 대표자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은 **B인 시민단체**이다. C인 이익집단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원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집단이다.

④ O: 정당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요구한다. 이처럼 **세 집단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가)에 해당 질문을 넣으면 A·B·C가 모두 '예'라고 답한다.

NoteBase

문 15.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보일러를 독점 생산하는 K 기업은 보일러 가격 10%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K 기업의 사원 A~D가 예상한 보일러의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수입 변화율을 나타낸다.

구분	A	B	C	D
판매수입 변화율(%)	10	−10	5	0

① A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본다.

② B는 가격 인상 후 보일러의 수요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③ C는 가격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작다고 본다.

④ D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A는 가격을 10% 올리면 판매수입도 10% 늘어난다고 예상한다. 판매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이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완전비탄력적 수요**를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판매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격을 올려 판매수입이 감소하면 수요는 탄력적이고, 증가하면 비탄력적이며, 변하지 않으면 단위탄력적이다. 수요량의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 정도를 판단할 때는 가격상승률과 수요량 감소율을 비교한다.

① O: A는 가격이 10% 오를 때 판매수입도 10% 증가한다고 예상한다. 판매량이 일정해야 가격과 판매수입이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따라서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완전비탄력적 수요**로 보는 것이다. 이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② X: B는 가격이 10% 오르면 판매수입이 10% 감소한다고 예상한다.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판매수입은 오히려 10% 증가해야 한다. 판매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수요량이 줄어 가격 인상 효과를 넘어섰다는 뜻이므로, B는 수요량이 감소하며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본다.

③ X: C는 가격이 10% 오를 때 판매수입이 5% 증가한다고 예상한다. 수요량이 일정하다면 판매수입도 10% 증가해야 하므로, 수요량은 감소한 것이다. 다만 판매수입이 증가했으므로 **수요량 감소율이 가격상승률보다 작다**. 따라서 C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본다.

④ X: D는 가격이 10% 올라도 판매수입은 변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 이는 가격 인상으로 판매수입이 늘어나는 효과와 수요량 감소로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상쇄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D가 보는 수요는 탄력적 수요가 아니라 **단위탄력적 수요**이다.

NoteBase

문 16. <보기>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한국인들은 김치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고 밥 생각이 간절해진다.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할 때도 당연히 김치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오랜 외국생활을 한 사람들은 매콤한 김치에 흰쌀밥을 가장 그리워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김치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①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② 문화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③ 문화는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④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라면을 주문하면 김치가 함께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식생활의 의미와 행동 양식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의 공유성**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에서 드러나는 속성은 문화의 공유성이다. 아래의 O/X는 각 설명이 보기의 속성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나타낸다.

① X: 환경에 적응하면서 문화가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은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는 과거와 현재의 식생활이 달라졌다는 내용이 없으며, 한국인들이 김치에 대해 비슷한 의미와 기대를 갖는 모습이 나타난다.

② O: **문화의 공유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생활 양식과 의미를 지닌다는 속성이다. 공통의 행동 기준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보기에서 라면을 주문할 때 김치가 함께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손님과 식당이 김치를 곁들이는 식생활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③ X: 문화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풍부해지는 것은 **문화의 축적성**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는 세대를 거치며 김치 문화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김치와 흰쌀밥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은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음식의 의미를 보여 준다.

④ X: 문화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문화의 전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는 식생활의 변화가 다른 문화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없다. 핵심은 여러 한국인이 김치에 공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비슷한 기대를 한다는 점이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가), (나)의 상황 및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 가능 인구수의 변화는 없다.)

<보기>

㈎ 직장의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 갑(甲)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 직장을 다니던 을(乙)이 학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table>
<tr><td colspan="3">① 전체 인구</td></tr>
<tr><td rowspan="2">③ 만 15세 미만 인구</td><td colspan="2">② 노동 가능 인구(만 15세 이상 인구)</td></tr>
<tr><td rowspan="2">④ 비경제활동 인구</td><td colspan="2">⑤ 경제활동 인구</td></tr>
<tr><td>⑥ 취업자</td><td>⑦ 실업자</td></tr>
</table>

* 실업률 ⑦÷⑤×100
* 취업률 ⑥÷⑤×100
* 고용률 ⑥÷②×100
* 경제활동참가율 ⑤÷②×100

① (가)의 경우 이전보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다.

② (나)의 경우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 고용률은 이전보다 하락한다.

③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다.

④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지만, (나)의 경우 이전보다 하락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에서는 을이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하므로 실업자 수는 그대로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한다. 따라서 기존 실업자가 있으면 실업률은 이전과 같지 않고 **상승**하며, 노동 가능 인구는 일정한데 취업자 수가 줄어 고용률은 하락한다. 다만 기존 실업자가 0명이고 변화 후 경제활동 인구가 0명보다 많으면 실업률은 0%로 유지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고,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 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다. 문제에서 노동 가능 인구수는 변하지 않는다.

① O: (가)에서 갑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이동한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만큼 실업자 수가 늘어나 **경제활동 인구는 그대로**이다. 실업률은 분모가 일정하고 분자인 실업자 수가 늘어 상승하며,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하고 취업자 수가 줄어 하락한다.

② X: (나)에서 을은 학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한다. 따라서 실업자 수는 변하지 않지만 실업률의 분모인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므로, 기존 실업자가 있으면 실업률은 상승한다.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 하락한다. 기존 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를 '실업률은 이전보다 상승하고'로 고쳐야 한다. 공식 정답 ②는 이 전제에서 성립한다. 다만 원문에는 기존 실업자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실업자가 0명이고 변화 후 경제활동 인구가 0명보다 많으면 실업률은 0%로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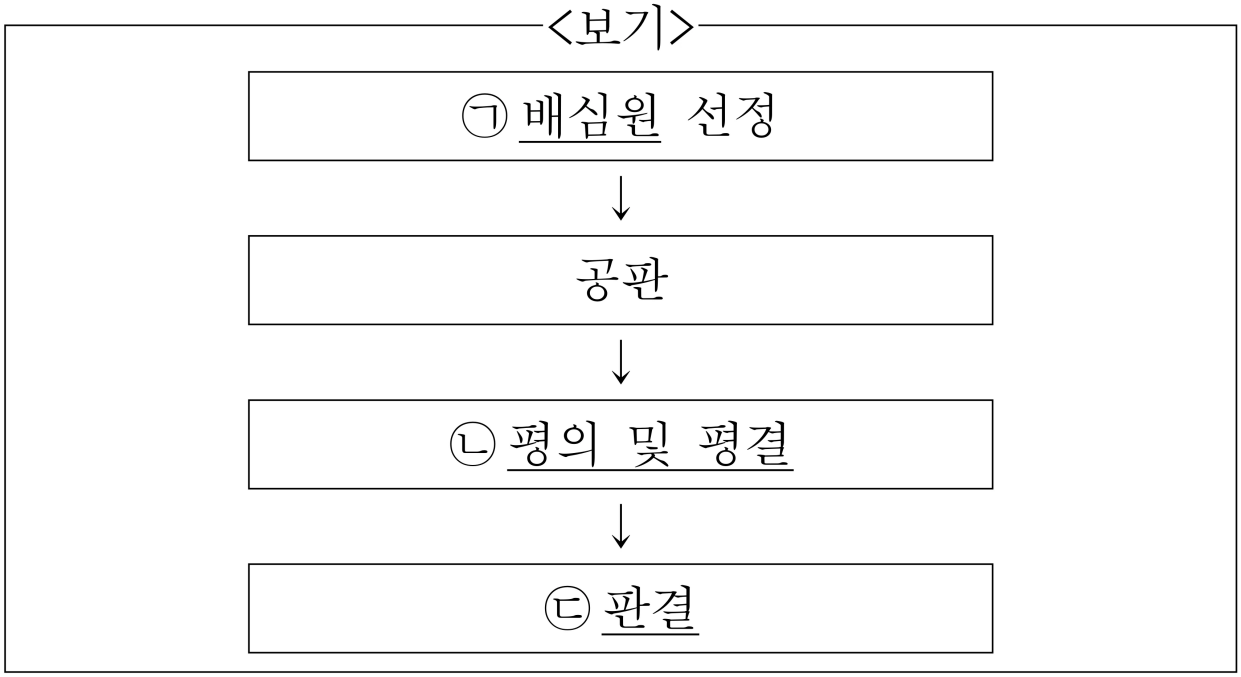
③ O: 실업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갑은 일자리를 잃고 구직 중이므로 실업자에 해당한다. 반면 을은 학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로, 이 문항에서는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한다.

④ O: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인 노동 가능 인구는 두 경우 모두 일정하다. (가)에서는 취업자가 실업자로 이동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변하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참가율도 일정하다. (나)에서는 취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다.

NoteBase

문 18. <보기>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절차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② ㉠은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③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결도 일반 형사재판의 판결처럼 불복할 수 있다. ㉢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이다. ㉠은 배심원, ㉡은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 ㉢은 재판부의 판결을 뜻한다. 평의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논의하는 과정이고, 평결은 그 논의를 거쳐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① O: ㉢은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하여 재판부가 선고한 1심 판결이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상소권을 인정하고, 제357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규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다**.

② X: 배심원에게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며,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등의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나이 조건은 맞지만, **법적 지식은 선정의 필수 자격이 아니다**.

③ X: 같은 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재판부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④ X: 국민참여재판은 민사재판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형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 실시된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원하더라도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재판까지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19. <보기>와 같은 글을 쓴 근대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해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국가는 국민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진다. 주권자인 국민의 _____㉠_____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 『인간 불평등 기원론』 中 —

① ㉠에는 '보통선거'가 적절하다.

②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이다.

③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다.

④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루소는 개인들이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 사회 계약**으로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때 국민은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에 따라 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루소이다. 자연 상태의 인간을 자유롭고 선량한 존재로 보고, 사회 제도에 의해 자유를 잃은 인간이 사회 계약을 통해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 단서이다.

① X: ㉠에는 **'일반의지'**가 들어간다. 일반의지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이다. 보통선거는 재산·성별 등의 조건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거 원칙으로, 국가 형성의 바탕이 되는 국민의 의지를 뜻하지 않는다.

② X: 루소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가 아니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가**이다. 루소는 1778년에 사망했고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시작되었다. 그의 인민 주권과 자유·평등 사상은 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③ X: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 사상가는 **홉스**이다. 홉스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보았다. 반면 루소는 제시문처럼 자연 상태의 인간을 자유롭고 선량한 존재로 보았다.

④ O: 루소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사회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개인들은 신체와 재산을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 공동체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일반의지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법에 복종하므로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시민적 자유를 누린다.

NoteBase

문 20. <보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기>

특징 \ 제도	A	B	C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아니오	예	예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가?	아니오	예	아니오

①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B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③ C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④ A, B는 C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C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부조**이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빈곤층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B는 사회보험이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 C는 공공부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 나머지 A는 돌봄·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이다.

① X: A인 사회 서비스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B인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X: B인 사회보험은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등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받은 급여만큼만 비용을 내는 방식이 아니므로 가입자 사이에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③ O: C인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므로, 대상자가 빈곤층으로 구분되어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④ X: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A인 사회 서비스**이다. B인 사회보험과 C인 공공부조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A와 B를 함께 비금전적 지원 제도로 묶을 수 없다.

NoteBase